

# 서울시, 2031년까지 주택 31만호 공급… 강북 활성화 추진

## 올해 신년 업무보고

3년째 주택 착공물량 6000호 확대  
녹지 생태도심, 비역세권 활성화 등  
강북, ‘완성형 균형 발전 모델’로

서울시가 주택 조기착공과 강북지역의 균형 발전을 올해의 중점 업무로 강조했다.

서울시는 20일(수)부터 2026년도 신년 업무보고를 시작했다. 신년업무보고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추진 배경과 과정, 쟁점과 성과는 물론 올해 계획까지 시정 전반을 점검하는 일정이다.

오 시장은 이날부터 29개 실국이 참여한 가운데 순차적으로 업무 보고를 받는다.

1일차에는 주택실, 도시공간본부, 미래공간기획관,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가 이뤄졌다. 오 시장은 해당 부서 정책과 사업을 보고 받고 주택 공급과 도시공간 혁신 전략을 점검했다.

주택실은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난 15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 일대 내부순환로 현장을 방문해 강북횡단 지하도고속도로와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목표로 신속통합기획 2.0을 가동해 3년 내 착공 물량을 7만9000호에서 8만 5000호로 6000호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공정 촉진 회의와 행정 지원을 강화해 조기 착공을 통한 주택 공급을 실현한다.

주택실은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면적 3만㎡ 이하 등 3년 내 조기 착공 가능한 24곳에 대해 관리 처분, 이주, 철거까지 지원해 착공 시점을 1년씩 앞당

긴다. 통상 착공 후 3~6개월 내 분양되므로 시민 체감 공급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신혼부부 대상 장기 전세 주택 ‘미리내집’ 입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 보증금 분할 납부제가 도입된다. 미리내집 입주 시 보증금을 70%만 납부를 하고 나머지 30%는 퇴거 시 납부하는 제도다. 보증금의 30%는 2.5% 저리를 적용해 부담을 덜어준다.

균형발전본부는 내년 초 개관을 앞둔 ‘서울 아레나’와 최근 개발 계획을 발표한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S-DBC)’, ‘광운대 역세권 개발’ 등 3개축을 연결해 강북 지역을 베드타운이 아닌 직주락이 어우러진 ‘완성형 균형 발전 모델’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약 5조9000억원 생산 유발 효과 창출이 전망되는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는 올해 초 SH 산업 단지 지정 신청을 시작으로 상반기 선도 기업 입주 업무 협약(MOU)을 체결한다. 올 하반기에는 산업 단지 지정 고시를 추진할 방침이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의 경우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을 진행 중이다.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이를 수용할 생활·문화 기반 시설이 연이어 확장되는 선순환 모델로 거듭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경계 지역 중 신내 차량 기지 등 미개발 지역을 수도권 광역 중심지로 육성하는 ‘신성장 엣지시티(EDGE-CITY)’ 조성이 시작된다.

또 강북횡단선, 목동선, 난곡선 등 강

북권 주요 교통망 확충을 막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도시공간본부는 ‘용산전자상가 특별 계획구역(11개소) 개발’, 유진상가·인왕시장 통합 개발을 통한 ‘홍제역 역세권활성화사업’ 등 강북 지역 거점 개발을 추진한다.

녹지 생태 도심 조성을 위해 세운 녹지축을 비롯해 DDP와 청계천을 잇는 도심 속 녹지를 추가로 확보해 ‘빌딩과 나무숲이 공존하는 도시’ 실현을 앞당긴다.

도시공간본부는 개발 사각지대에 놓인 ‘비역세권(성정잠재권)’ 활성화 방안을 설명했다. 재택근무 확산과 산업 구조 변화로 공실이 증가한 대규모 업무·상업 공간을 주거·문화 등 용도로 전환하고 노후 지하철 역사 시설을 개선한다.

미래공간기획관은 용산서울코어를 비롯해 민간 개발 사전 협상을 통해 확보한 약 10조원 규모 공공 기여는 강북 권역 개발 재원으로 우선 활용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사립대 등록금 줄인상… 재정난 vs 학생 부담

한국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지난해에 이어 등록금 인상 예정  
교육 경쟁력 등 위해 필요 입장

주요 사립대학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자 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학은 오랜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이 심화되고 교육의 질이 떨어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학생들은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데 비해 체감되는 혜택이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주요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이 최근 현실화되며 총학생회들이 저지에 나섰다. 전날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본부가 추진하는 3.19% 등록금 인상안을

“엄치도, 책임도, 논리도 없는 갑질 인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이 지난 10~12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2680명) 중 95.49%가 등록금 인상에 반대했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지난 8일 진행된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회의 이후 “지난 인상 당시 요구안도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 현 상황에 학생이 고려되지 않은 학교 측의 일방적인 인상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화여대 총학생회도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등록금 인상을 전제로 한 재정 확충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 강화와 대학의 구조적 개혁이 먼저 논의돼야 한다”며 “학생 동의 없는 등록금 인상, 민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등심위, 책

임 없는 재정 논의에 학생 사회는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학생들의 반발에도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올해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직전 3개연도(2023~2025)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2배인 3.19%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등록금 인상을 두고 학생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대학 측은 재정난과 교육 경쟁력 약화를 해소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보다도 등록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 수원시 공립박물관 3곳, 평가 인증기관 선정

수원·수원화성·수원광교박물관

수원시 3개 공립박물관인 수원박물관, 수원화성박물관, 수원광교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5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에서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증 유효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수원박물관과 수원화성박물관은 2017·2019·2022년에 이어 4회 연속, 수원광교박물관은 2019·2022년에 이어 3회 연속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는 공립박물관의 운영 내실화와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박물관을 3년마다 평가·인증하는 제도로, 설립 목적 달성도, 조직·인력·시설·재정 관리, 자료 수집·관리, 전시·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적 책임 등 5



수원박물관 전경.

개 분야를 종합 평가한다.

2025년 평가 대상 전국 공립박물관 296개 중 200개 박물관이 인증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수원시 3개 박물관은 운영, 전시, 유물 수집·보관,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설립 목적 달성도 항목에서 모두 100점을 받았다. /수원(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 서울시 “外人 택시불만 7개월간 487건”

택시 정보 무늬 신고 시스템 운영  
外人 신고, 전체의 34.3% 차지

서울시가 지난해 6월 전국 최초 ‘택시 정보 무늬(QR) 신고 시스템’ 운영을 시작한 뒤 ‘외국인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6~12월 ‘택시 QR 불편신고 시스템’을 통해 외국인 불편신고 총 487건을 접수했다. 12월(167건)이 전체 신고의 34.3%를 차지했다.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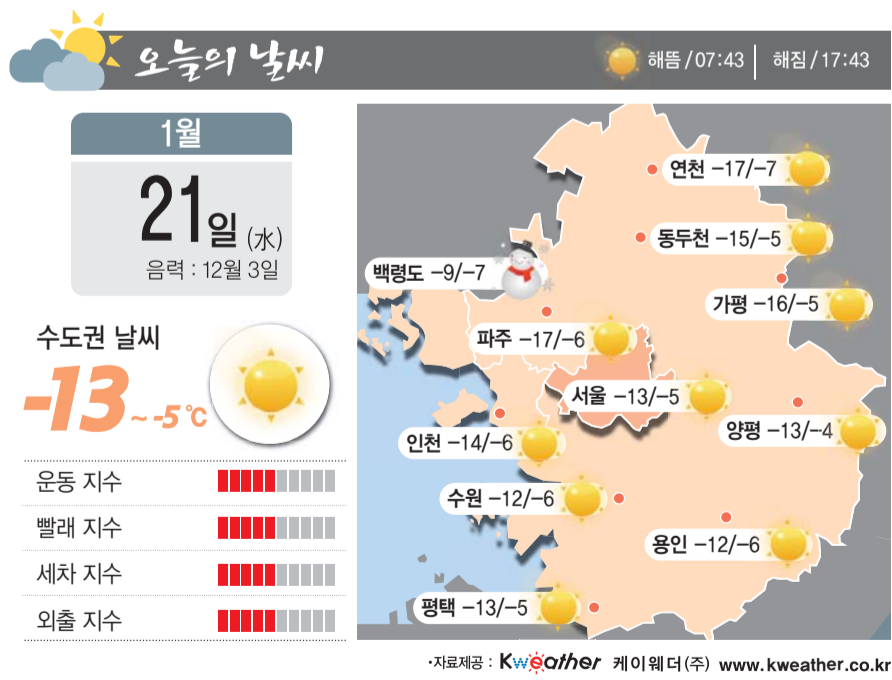
월 93건, 7월 69건, 8월 51건 순이었다.

시는 부당 요금 등으로 신고가 접수된 택시 운수 종사자를 조사 중이다. 그중 8건은 사실 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4일 김포공항에서 외국인 승객을 태우고 연희동으로 운행한 한 택시 기사 A씨가 미터기에 기록된 3만2600원이 아닌 5만6000원을 임의로 징수한 사실이 드러나 ‘부당 요금 징수(임의 요금)’로 처분됐다.

외국인이 택시 이용 중 부당 요금이나 불편을 겪었을 경우 현장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시는 택시 내부나 주요 관광지 등에 ‘QR 택시 불편신고 시스템’ 안내 붙임 딱지, 현수막을 부착하고 있다. 서울시 공식 SNS에서도 홍보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택시 이용 불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부당 요금 근절을 위해 시는 택시 영수증에 영문을 병기하고 할증 여부를 표시한다. 플랫폼사별로 각기 다르게 표시했던 용어를 미터기 요금(Meter Fare), 통행료(Toll fee)로 통일한다. /이현진 기자



▲트럼프, 마크롱에 ‘가자 평화위’ 압박…“佛와 인에 200% 관세” /사진 뉴시스  
▲美연방대법원 ‘상호 관세’ 판결, 이르면 20일 결론 가능성

▲美재무, EU ‘관세 대응’에 “현명하지 못해…어차피 합의 안 될 것”  
▲美민주, 트럼프 ‘노벨상-그린란드’ 연결에 “정신상태 극도로 우려”

▲中관영지 “작년 5% 성장률, 압박 속 中경제 회복력 입증”  
▲“우크라이나 재건에 1200조?”…유럽, 트럼프 평화 계획 의심